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2호

발행일: 2023. 3. 31. (금)

제404회 국회(임시회, 2023. 3. 1. ~ 2023. 3. 3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 나. 소방대응체계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 1. 개관

제404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3월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15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3월 30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도 58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추후 별도 브리핑 자료를 통해 다루고자 합니다.

제404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3)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시 예술인 긴급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4회 국회의 2023년 3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5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행정안전위원회(9)	<a href="#">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2		<a href="#">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3		<a href="#">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4		<a href="#">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행정안전위원장
5		<a href="#">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정부
6		<a href="#">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	박성민 의원 등 13인
7		<a href="#">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백혜련 의원 등 10인
8		<a href="#">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a>	이형석 의원 등 12인
9		<a href="#">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이형석 의원 등 12인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1)	<a href="#">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	<a href="#">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2	여성가족위원회(4)	<a href="#">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a>	여성가족위원장
13		<a href="#">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a>	조은희 의원 등 11인
14		<a href="#">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a>	조은희 의원 등 12인
15		<a href="#">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a>	정부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소방대응체계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고지 대상기관 확대

#### 개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 동안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으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신상정보가 우편·모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되는 등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의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아동 성범죄 피해 예방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확대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등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여성가족위원회	<p><b>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대면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 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여러 기관과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대면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 등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법적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2023-03-23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 과제목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홍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요 내용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법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120대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 과제목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 주요 내용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현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증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 간 협업으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2023 정부 업무보고(여성가족부, 2023. 1. 9.)

#### □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 강화

-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신규 배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간 **협력 강화**
  - 미성년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만 21세→24세,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 및 자립지원강화 방안 검토
- (제도 개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수감 시 공개 중지 및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형사 처벌** 추진(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
  -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태 조사**(신규) 실시
  - \* 온라인 상 성적 유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 대상 오프라인까지 확대, 위장수사 실효성 강화 모색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민기 의원안: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 2020. 12.

[김병욱 의원안: 성범죄자 고지정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지](#) 2020. 12.

[이종성 의원안: 취업제한기관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추가](#) 2022. 9.

[권인숙 의원안: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 2022. 9.

[권인숙 의원안: 신상정보 고지대상가구의 명확성 제고 등의 정비 등](#) 2022. 9.

[최혜영 의원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2022. 9.

[김영진 의원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2022. 9.

[홍석준 의원안: 취업제한기관을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2022. 9.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제재 추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III):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12.

중형주의 형사제재 맥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 중 그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운영 과정과 이 제도들이 재범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안처분제도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수행된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제도로써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 취업제한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에 관한 실증적 조사 중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중형주의 형사제재라는 배경에서 신설된 보안처분제도가 보안처분의 입법목적인 사회방위라는 보안목적과 사회복귀라는 개선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현행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인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하여 성범죄자 보안처분제도의 규범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무정책연구원 「KIC ISSUE PAPER」 2021. 5. 31.

- 본 연구는 다양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는 형벌과 다른 보안처분이므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운영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등록대상자를 선별하고, 등록이 결정된 대상자를 재범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4개의 등급을 나눈 후 등급에 따라 등록기간,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주기, 등록면제신청을 위한 최소 경과 기간, 공개 여부, 공개방식 및 기간도 결정하도록 해야 함.
- 현재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 삼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관리체계를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가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략의 하나이므로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수강·이수명령, 성충동약물제도와 같은 다른 재범방지 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법무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기간 단축, 수사 활용 목적의 등록정보 추가(예: 온라인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신원식별정보 등), 신상정보등록시스템과 다른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등록된 신상정보의 수사정보로서의 활용도 제고, 등록 보호관찰대상자 정보를 활용한 등록정보의 정확성 확보, 현재 등록의무위반자에 대한 단계적 처벌방식 적용(처음에는 과태료에서 시작하여 위반이 누적되는 경우 형사처벌), 신청방식의 등록면제제도를 직권심사방식으로 개편 등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의 위험도에 따른 상이한 공개방식 및 매체의 활용, 우편 고지 대상 확대(미혼여성 혹은 여성 1인 가구로 확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사업과 우편 고지의 연계 등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 I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12.

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3년간의 중장기 과제로 기획되었으며, 각 년도 별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전자감독제도,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및 취업제한제도와 같은 4가지 보안처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에 본 연구원에서 이에 관한 평가연구가 한 번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이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실증자료를 수집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12.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7-06 2017. 10. 3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 재발 방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2006년 6월 30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규정의 일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음으로써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적 정비 및 성범죄로 인한 취업대상자의 취업제한 관리 방식에 관한 제도개선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 나. 소방대응체계 강화

### 개요

현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119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 등은 ▲산불재난 대응력 강화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과 첨단장비 개발·보급 ▲국가직 전환 관련 보완대책 ▲소방지휘관의 역량 강화 및 현장대원 우대정책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한 입법이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본회의에서는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행정안전위원회	<p><a href="#">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p> <p>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으나,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하지만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 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화재 등 재난으로 이용 하는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구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바, 통신망으로 재난 시 제때 대응하기 위하여는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 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p>	2023-03-23 (수정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행정안전위원회	<p><b><u>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u></b></p> <p>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익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화재는 그 경제적·인적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삶 전반에 큰 피해를 주므로 물류단지의 밀집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당연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p>	2023-03-23 (수정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 과제목표

기후변화·신종 감염병 등 복잡·대형화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디지털 재난관리)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

- 분산된 재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난 대비 및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

(재난관리 강화)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 재난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지원 강화, 민관협업 기반의 재난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역량 제고

(안전 생활환경 조성)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소방대응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 국민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도입, 소방 첨단장비 보급,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2023 정부 업무보고(행정안전부, 2023. 1. 27.)



## □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개편

- (대응체계) ①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으로 재난유형별 대응력 제고  
②신속한 현장보고·지휘체계 확립 ③소방↔경찰 공동대응 강화(연락관 파견 등)  
\* (기존) 형식적·대규모 통제단 → (개선) 재난 유형·특성별 통제단 규모·형식 변경
- (현장응급의료) ①체계적·전문적 임시의료소 운영을 위한 구급지휘팀 신설  
②다수사상자 재난 대비 119응급의료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 환자 이송현황 실시간 추적관리하고 소방↔병원 간 정보연계시스템  
\*\* 소방청(소방서)↔복지부(DMAT) 간 현장정보 공유, 합동훈련 확대
- (구급서비스) ①인명소생률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14→21종), ②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Heli-EMS 등) 운영
- (지휘역량)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지휘관 자격인증제(4단계) 시행



※ 지휘훈련시설(VR 기반) 확충 : 현재(중앙, 서울, 경기, 광주, 경북) → '23년(부산, 강원)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2.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2. 9.

[소방청, 물류 창고시설 중앙화재안전조사 추진](#) 소방청 보도자료 2023. 3. 5.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 12. 2.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소방안전 강화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12. 30.

□ 최근 택배 물량의 증가로 물류창고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창고의 기능도 단순 보관에서 포장·가공까지 다양화되고 있음

- 물류창고의 대형화, 신규 설비 설치, 전력 수요 확대 등 창고의 건축물 특성 변화에 따른 기존 화재안전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 물류창고 화재는 넓은 바닥면적, 높은 층고 등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주인원이 많지 않아 화재의 초기 감지가 어려움

- 화재의 신속한 감지와 진화성능을 향상을 위해 물류창고의 특성이 반영된 관련 제도의 강화·정비와 기술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은 물류창고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헤드 및 설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위하여 저장물품의 종류, 적재방식, 적재 높이 및 간격 등에 따라 적합한 소방

시설(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계를 달리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위험성을 고려한 성능위주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강화된 규정은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소방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9. 8.

본 용역과제를 통하여 화재경계지구와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제도의 모든 면을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화재안전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 행정력 사용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방 무선통신망 운영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소방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8. 10.

본 연구에서는 제천화재 이후 소방무선통신망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에 따라 소방기관의 다양한 무선환경 분석과 운영·관리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제천화재에서 도출된 소방무선통신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도 소방본부별 여건에 따른 독자적인 무선망 구성·운영 및 무선통신 시설과 장비특성에 따른 적절한 관리 기준 마련한다. 또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의 중복 투자 제한으로 인한 노후화 시설·장비의 개선과 난청 지역 해소 및 무선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무전기 및 TRS와 같은 재난 안전통신 기술 및 주파수에 대한 국내외 이용 동향을 파악하며, 2018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 완료예정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른 활용방안과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와 소방 무선통신망인 무전망과의 이원화 방안을 제시한다.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